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태블릿 판매량이 분기 기준으로 10% 넘게 감소한 것은 태블릿 시장이 열린 이후 처음이다. 2015년 한해 총 판매량은 2억2천430만 대로 전년보다 8% 줄었다.

특히 4분기 태블릿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한 배경으로는 '태블릿 원조' 애플의 부진이 주목됐다.

애플이 스마트폰(아이폰6·아이폰6+)과 스마트워치(애플워치)에 주력하느라 자사 태블릿인 아이패드의 기술 혁신에 소홀했다는 분석이다. 2015년 하반기에 내놓은 대화면 태블릿 '아이패드 프로'가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애플은 4분기에 1천610만 대(점유율 23.1%)의 태블릿을 판매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무려 25% 줄어든 수치다.

태블릿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 쪼그라든 가운데 노트북처럼 키보드를 달아 쓸 수 있는 '투인원(2in1)' 제품은 단독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인원 태블릿은 4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무려 379%나 증가했다.

태블릿 운영체제(OS) 판도도 뒤바뀌고 있다. 윈도 태블릿의 판매량은 전년보다 59% 증가했지만 안드로이드와 iOS 기반 태블릿은 각각 7%, 22% 감소했다.

금융업

■ 개요

2015년 금융권은 기준금리 인하로 순이자마진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이익이 급감했다. 반면 고객들은 집값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은행에 손을 벌리면서 가계 대출이 1천200조원을 넘겼다.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의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대 중반의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하는 한편, 소득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여심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경쟁력 제고 방안도 강구했다. 금융당국은 영국이나 호주 등 선진 금융에서 시도했던 계좌이동제를 도입해 은행의 경쟁을 활성화했다. 23년 만에 은행업의 빚장을 풀어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보험상품 가격을 완전히 자유화하고,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경쟁력 로드맵도 발표했다. 1993년의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이후 22년 만에 이뤄지는 보험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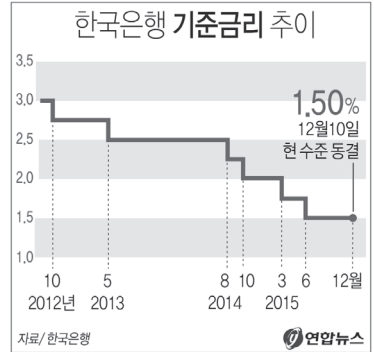
은행권은 보험·증권·은행을 아우르는 복합점포를 선보이며 금융산업 벽 허물기에 나섰다. 핀테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존 고객을 지키면서 미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경주했다.

세계 경제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국내 한계기업은 급증했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출해 준 은행의 연체율이 오르고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급증하면서 은행권의 어려움도 가중됐다.

은행권은 늘어나는 비용을 줄이고자 임금피크제를 손보고 특별퇴직을 단행했다. 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성과주의 도입까지 추진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샀다.

■ 1% 금리시대 열렸다

한국은행은 3월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내렸고 석 달 뒤 6월에 다시 0.25%포인트 인하했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됐지만 1%대로 접어든 건 사상 처음이다.



한은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 경기의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컸다. 중국 등 신흥시장의 경기 둔화로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6월부터 기승을 부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 커다란 악재로 작용했다. 세계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이어지는 상황도 한은의 저금리 기조에 영향을 줬다.

1%대 기준금리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은행들이 기준금리에 맞춰 예금 및 대출금리를 줄줄이 내리면서 시장에서 연 2%대 정기에 예·적금 상품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주택매매를 비롯한 부동산 경기는 호전됐다. 2015년 주택거래량은 2014년보다 18.8% 증가한 119만3천691건으로 종전 최대치인 108만2천453건(2006년)을 11만여 건 웃돌았다.

주택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심해지기도 했다. 은행 이자수입이 크게 낮아졌고 상대적으로 월세 수입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통화량도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합친 통화량(M2·광의통화)은 2천232조원으로 2014년 같은 달보다 8.8% 늘었다.

그러나 실물경제 전반에서 1%대 저금리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1%대 기준금리는 애초 물가를 끌어올려 디플레이션 우려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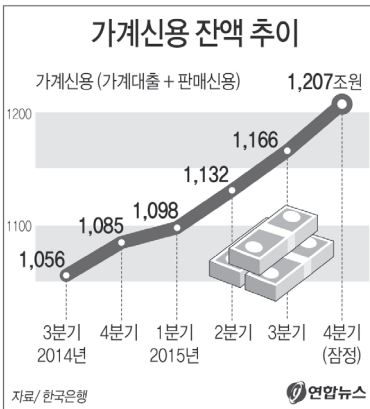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에 그치다가 11월이 돼서야 1년 만에 1%대로 올라섰다.

무엇보다 1%대 저금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가계 부채였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 급증한 가계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됐다.

■ 1천200조원 가계부채 뇌관

저금리와 부동산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세를 이어가 작년 말 기준으로 1천2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20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 기록이고 1천200조 원선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1년 전인 2014년 말 가계신용 잔액이 1천85조3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무려 121조7천억원(11.2%)이 늘어났다. 연간 증가규모

도 사상 최대 기록이다. 지금까지는 2011년에 73조원이 늘어난 것이 가계신용의 최대 증가규모 기록이었다. 2015년 말 가계신용 잔액은 3분기 말(1천166조9천억원)보다는 41조1천억원(3.5%)이 늘어 분기 증가 규모로도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특히 가계신용의 분기 증가규모는 2015년 1분기 13조원, 2분기 33조2천억원, 3분기 34조4천억원에 이어 4분기엔 4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졌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진 빛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가계신용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회복, 전세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2015년 4분기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대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득 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상환 유도 등을 담은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16년 2월부터(비수도권은 5월 2일) 적용한다.

가계신용을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1천41조8천억원으로 집계돼 3분기 말보다 39조4천억원(3.6%) 늘었고, 2014년 말보다는 116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아파트 분양 호조로 인한 집단 대출 수요증가 등으로 4분기 중 22조2천억원 늘었다.

3분기 증가액 14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8조원 가량 커졌다. 4분기 증가액 22조2천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18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증가분 4조1천억원은 기타 대출이다. 이로써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01조7천억원으로 400조원 선을 넘어서었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3분기 6조3천억원에서 4분기 9조6천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보험과 연금기금 등 기타 금융기관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3분기 9조8천억원에서 4분기 7조6천억원으로 줄었다.

판매신용은 2015년 말 잔액이 65조1천억원으로 4분기 중 1조7천억원, 1년 새 5조원 늘었다. 신용카드회사의 판매신용 잔액 증가세 둔화로 4분기 증가 규모는 3분기 3조9천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 안심전환대출 ‘광풍’

정부가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2%대 대한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이 3월 출시했다.

정부는 당시 가계대출이 1천100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올라가자 대출 속도를 줄이는 한편 부채의 질을 개선하고자 전환대출을 내놓았다.

이 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을 고정금리와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이다. 담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앞으로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이자비용 증가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출자는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모두 1, 2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한도는 약 30조원으로 책정됐다.

출시와 함께 광풍이 불었다. 출시 하루 만에 4조원이 승인되는 등 매일 4조~5조원의 신청이 잇따르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주택금융공사는 모두 30조8천억원 상당의 안심전환대출 자산을 주택저당증권(MBS)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7월께 마무리했다. 공사는 22조원 상당의 만기 1~7년물 MBS를 안심대출 취급은행에 매각했다.

만기 10~20년물 8조8천억원 어치는 경쟁입찰을 실시해 7조7천억원은 일반투자자에게, 나머지 1조1천억원은 취급은행에 팔았다. 주택금융공사가 신규대출을 인수해 MBS로 유동화하면 해당 은행이 1년간 보유할 후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

■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10월 말 시행됐다.

600조원대(2015년 기준)의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이동)’를 일으킬 수 있는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계좌이동제는 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을 비롯한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이 참여했으며 변경 서비스는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자동이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금융 통합 인프라다. 은행 등 51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약 7만 개 요금청구 기관에 대한 7억 개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 간의 약 5천만 개 자동송금 정보를 통합해 관리한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야 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지 및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바뀌게 된다.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와 자동송금 조회·해지 변경 서비스는 2016년 2월부터 시작된다. 신문사·학원 등을 포함한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는 2016년 6월부터 가능하다.

이용 한 달 만에 48만5천 명이 접속했다. 이 가운데 변경은 13만5천 건, 해지는 14만5천 건이었다.

금융결제원과 업계는 본격적인 주거래계좌 이동 현상은 은행 각 지점과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변경 서비스와 자동송금 조회·해지 변경 서비스가 시작되는 2016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금융당국은 23년 만에 새로운 은행을 인가했다. 지점을 둔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라 핀테크 기술을 결합한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첫 사업자로 카카오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T가 이끄는 K뱅크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카카오컨소시엄에는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 11개사가, K뱅크 컨소시엄에는 포스코CT, GS리테일, 우리은행 등 19개사가 참여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금융+IT)를 활용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은행을 말한다. 무점포 영업이므로 기존 은행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특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전망이다.

PC나 스마트폰으로 계좌개설부터 입출금까지 은행업무가 가능해 점포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은행 일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국내 주요 은행은 점포가 은행별로 1천 개가 넘지만 인터넷은행은 인터넷 기반이므로 점포를 둘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없어진다.

각 컨소시엄은 점포를 대체할 만한 오프라인 대체수단도 마련했다. 카카오톡 등의 통신수단과 우체국, 편의점, 공중전화박스를 자동화기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0%대 중금리 신용대출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홍채·지문인식 더 발전한 핀테크

금융과 기술의 결합력이 탄력을 받으면서 핀테크(Fintech)가 각광을 받은 한해였다. 공인인증서 대신 홍채와 지문으로 로그인하는 첨단 기술도 선보였다.

IBK기업은행은 12월 홍채 인식을 통해 고객을 인증하고 금융거래를 제공하는 '홍채인증 자동화기기(ATM)'를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시범 운영했다.

고객이 먼저 자신의 홍채정보를 은행에 등록하면, 이후로는 카드나 통장 없이도 ATM기기를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ATM기기에 설치된 카메라에 눈을 맞추면 고객의 홍채를 인식해 주인을 파악하고, 이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보통의 ATM기기와 같은 업무를 볼 수 있다.

신한은행도 12월 디지털 키오스크라는 비대면 채널을 선보였다. 자동화기기에 설치된 영상통화를 통해서 무통장 송금, 체크카드 신규·재발급, OTP·보안카드 발급 등 은행 업무의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휴대전화로 모든 은행업무를 진행하는 모바일 전문은행도 속속 출시됐다. 5월 우리은행이 첫 모바일은행인 '위비뱅크'를 출시하면서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위비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중금리 대출상품인 '위비모바일대출'을 출시해 성공을 거뒀다.

월평균 80억원의 대출을 집행해 11월 초순까지 400억원의 누적 대출을 기록했다. 지난 9월에는 위비 SOHO 모바일 신용대출을 출시하면서 핀테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출방식은 은행권에서 최초로 선보였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vs 케이뱅크 비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자본금	3,000억원 (2018년 4천억원 증자)	2,500억원
주요주주 (지분율)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10%*) 국민은행(10%)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KT(8%*)
영업개시 예상 시점	2016년 하반기	2016년 하반기
흑자 전환 목표 시점	3년	3년
플랫폼 특징	카카오톡 (3,800만 명이 하루 55회 사용)	모바일 외에 GS리테일 편의점, KT 공중전화부스, IPTV 등 활용
주요 서비스	· 중금리대출(빅데이터 기반) · 소규모·단기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 카카오톡 기반 간편 송금 · 카카오톡 공동통장 · 카드·VAN·PG 없는 간편결제 · 카카오톡 기반 금융 비서 · 카카오 유니버셜 포인트	· 중금리대출(빅데이터 기반) · 편의점·공중전화 활용 '우리동네 ATM' · 토털 간편지급결제 · 통신·콘텐츠 결합 예금상품 · 휴대폰/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 · Robo-advisor 기반 자산관리 · 오픈 API 뱅킹 플랫폼

자료/ 금융위원회, 각사

* 4%까지만 의결권 행사 가능

연립뉴스

■ 한계기업 증가에 바빴던 금융권

조선과 철강, 건설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주요 업종 중심으로 기업 부실이 두드러지면서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저금리 상황에서 방만하게 불어난 유동성으로 연명한 부실 기업들이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면서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의 엄정한 신용평가를 독려하면서 산업은행과 유암코(연합자산관리)를 통한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 조정을 추진했다.

11월을 기준으로 정기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과 D등급의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돼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 기업은 각각 70곳과 105곳으로 모두 175곳이다.

구조조정 대상은 2014년보다 40%(50곳) 늘어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12곳)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3년 112곳, 2014년 125곳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2015년에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최저등급인 D등급이 2014년(71곳)보다 48%(34곳)나 늘어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여기서 C등급과 D등급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각각 '있다'와 '없다'로 판단된 곳이다. C·D등급을 받은 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C등급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이고 D등급은 채권금융사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거나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은행은 신규 여신을 중단하고 만기가 된 여신을 회수하게 된다.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은 대기업에서도 진행됐다. 대기업 그룹 차원에서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제도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은 2015년 대기업그룹 41개 계열을 주채무계열로 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11개 계열을 재무구조개선안정 대상으로 선정해 자본확충, 자산매각, 사업구조 재편 같은 자구계획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

개별 대기업에 대해선 2015년 6월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35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추려냈다. 금융감독당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1월부터 12월까지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했다.

■ 특별퇴직 바람 분 은행권

연초부터 특별퇴직 바람이 금융권을 강타했다. 신호탄은 KB국민은행이 쏘았다. 국민은행은 2015년 6월 1천121명을 특별퇴직시켰다.

국민은행이 특별퇴직을 실시한 건 2010년 어윤대 회장 시절 이후 5년 만이다. 이는 전체 신청대상자 중 20.4%에 해당한다. 퇴직 임금피크 직원은 최대 28개월 이내, 일반 직원은 기본 30~36개월 이내의 특별퇴직금을 받았다.

2008년부터 도입했던 임금피크제도 새롭게 개선했다. 55세부터 직전 연봉 총액의 50%로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기존 방법(일반직무)에서 영업현장을 뛰며 성과급을 받는 마케팅직무, 희망퇴직으로 세분화했다.

외국계 은행인 한국SC은행도 2년 만에 특별퇴직을 단행했다. 모두 961명이 나갔는데 이는 전체 임직원(5천300명)의 18% 수준이다. 2013년 말 45세 이상, 근속기간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시행해 200여 명을 감축했고, 2011년에는 특별 명예퇴직으로 800여 명을 내보냈다.

SC그룹의 글로벌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것이어서 여타 은행들에 견주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특별퇴직금(월고정급 기준)은 근속기간에 따라 32~60개월분을 받았고, 재취업 및 창업 지원금으로 2천만원, 자녀 학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을 별도로 수령했다.

하나와 외환은행의 통합으로 9월 1일 출범한 KEB하나은행도 4년 만에 특별퇴직을 단행했다. 모두 12월 말 기준으로 690명이 특별퇴직했다. 이는 전체 임직원(2015년 11월 말 기준 1만6천100명)의 4.3% 수준이다. 특별퇴직 대상은 옛 하나은행 직원 361명, 외환은행 직원 329명이다.

특별퇴직 광풍과 함께 성과주의 논의도 금융권에서 확산됐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하나로 은행의 성과주의 확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당국과 사용자 측은 저금리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하락, 핀테크 도입 등으로 갈수록 은행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면에서 성과주의 연봉제 도입은 필수라는 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제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금융산업에서 호봉제 도입 비율은 91.8%로 전체 산업(60.2%)보다 높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가 격하게 반발하면서 성과주의와 관련한 사측과 노조 측의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 보험정책 패러다임 변화···보험경쟁력 로드맵

정부가 10월 발표한 보험경쟁력 로드맵은 판매 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을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93년의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이후 22년 만에 이뤄지는 보험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부를 만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로드맵에서 보험상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고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다(±25%)를 폐지하기로 했다.

위험률 조정한다를 폐지하면 보험사가 보험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한 구조의 상품을 유사한 가격에 파는 구조에서 서로 다른 상품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파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고급화된 상품은 가격이 오르고 보험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덤핑 상품이 등장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위험률 조정이 급격히 이뤄져 보험료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료는 2016년 가격 상승률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한 후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2015년보다 최대 30%, 2017년에는 전년대비 최대 35% 오를 수 있다. 2014년 기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38%에 달한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출금액이 38% 많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5년째 실손의료보험 인상을 막다 보니 생긴 결과다.

금융당국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전신고제는 새로운 위험 보장 상품을 처음 개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당국이 직접 만드는 표준약관은 없애되 실손의료·자동차보험만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넘겨두기로 했다.

보험사의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사후 책임은 대폭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나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일부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 '절절포' 바꿨던 금융개혁

정부가 2015년 금융개혁 차원에서 손을 본 규제 건수가 전체의 20%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수조사로 파악한 금융법령규제 1천64건 중 20%에 해당하는 211건을 2015년 개선했다.

그간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영업행위 규제는 확 풀되, 건전성과 시장질서 규제는 선진화하고 소비자보호규제는 강화한 결과다. 아울러 금융행성지도를 2014년 말 700여 건이던 것을 50건으로 줄이고 가격, 인사, 배당 등 금융사 경영사항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세웠다.

은행 쪽에서는 23년 만에 은행업 신규 인가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됐고, 은행 방문 없이 휴대인식이나 영상통화 같은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이 22년 만에 허용됐다.

한국거래소를 지주체제로 개편해 코스피, 코스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거래소 구조개편 방안도 11년 만에 마련했다. 보험에서는 인터넷으로 여러 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11월 말 문을 열었다.

서민금융지원대책에선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4대 정책상품을 확대해 2018년까지 270만 명에게 22조원의 금융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사 43곳, 중소기업 156곳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3천575건의 건의를 접수해 그 중 45.8%를 수용했다.

핀테크도 산업으로서의 외형을 갖춰갔다. 한국핀테크포럼에 등록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은 2015년 5월 말 44개에서 11월 말 360개로 급증했다. 전자금융거래 매출액은 1조9천260억원에서 2조2천340억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물 없는 모바일카드 발급 건수도 1만8천 건을 넘어섰다.

증권

■ 개요

2015년에도 주식시장은 상반기에 오르다가 하반기에 내리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이며 끝내 '박스피'(박스권+코스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 가운데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가 상반기 상승 랠리를 이끌며 한때 박스권

탈출을 바라보기도 했으나 결국 물거품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 글로벌 전방에 흐르는 불확실성은 내내 증시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박스권 탈피 실패…코스피 2.39% 상승

코스피는 2015년 폐장일인 12월 30일 1,961.31로 마감했다. 2014년 말(1,915.59)과 비교하면 2.39% 올랐지만 지난 2011년 이후 이어진 장기 박스권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다.



▲ 2015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일인 12월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직원들이 색종이를 뿌리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5.00p 내린 1,961.31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는 연초만 해도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실제 코스피는 4월 23일 연중 고점인 2,173.41(이하 증가 기준)까지 올랐다.

코스피는 그러나 서서히 악재가 불거지면서 후퇴하기 시작했다. 5월에 시작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중국 관광객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며 승승장구하던 화장품과 여행, 유통주 등의 발목을 잡았다.

무엇보다 연중 내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세계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드리우며 증시를 짓눌렀다. 특히 상하이종합지수가 하루 만에 8.49% 떨어지며 중국판 블랙먼데이가 터진 8월 24일에는 코스피도 연중 저점인 1,829.81로 급락했다.

상반기 증시를 떠받쳐주던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8월 5일~9월 15일(29거래일)에는 사상 최악의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여 무려 5조5천432억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그럼에도 코스피는 다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시도했다. 10월 들어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등도 호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코스피의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증시는 상반기에 고점을 형성했다가 하반기에 부진한 '상고하저'의 흐름으로 막을 내렸다.

다만 기업공개(IPO)의 붐이 일며 증시의 덩치는 불어났다. 연말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1천243조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원 늘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1천200조원대에 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